

# ‘靑 국민청원’ 사회적약자통로로... 인권·성평등·안전 順

1년간 청원 16만건 분석

靑 관계자 답변 청원 25건 달해  
국민추천 20만 넘는 청원도 35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등의 의견이 많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한 청원은 지금까지 25건에 달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도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독에 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 ▲TV조선의 종편허

〈워드 클라우드〉



/자료=청와대

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 구제 등 9건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16만건에 대해 한 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분석에선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와 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분석 결과 국민청원 페이지가 여성, 아기, 학생 등 사

회적 약자들을 위해 호소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 분석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로 언급됐다.

‘아기’의 경우엔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도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이날 현재 20만 이상 청원 35건(전안법 2건 포함) 중에선 인권과 성평등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이 4건이었다.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8월부터 문을 연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올해 1월까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은 경우는 8건에 그쳤지만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 보름만에 27건이나 늘어나 국민청원에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요일별로는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가 많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020년까지 北 비핵화 달성땐 北美 수교·평화협정 체결키로

세기의 회담 ‘북미 빅딜’ 윤곽

美 주도 핵무기 해체·반출 제시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세기의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밀그림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입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이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미 빅딜의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험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역할 분담해 대북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채찍을 들고 철저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때 제공할 당근을 제시한다.

우선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핵무기 해체를 미국 주도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매우 빨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조기에 폐기해서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무장 해제를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없애라고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협뉴스

압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보유 핵’과 ‘미래 핵’을 모두 포기하는 조치의 시한을 2020년으로 정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후 국무부 선임 정책기획관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의지 여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력의 핵심인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를 수개월 안에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보유 핵’ 일부를 조장국의 반출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것이 미국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은 결국 불가침 의사의 서면 확인과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

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측면에서 ‘대북 제재 해제 플러스 알파’를 거론했다.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긴 어렵지만 미국과 제3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막는 각종 미국 독자적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에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진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의 대북 융자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아직 북한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론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간 합의의 이행 방식 면에서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행에서 단계성과 동시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압축함으로써 빠르게, 크게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같은 방안은 우선 북한의 동의를 요한다. 또 북한이 동의하더라도 최대의 허들은 ‘검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협뉴스

## 소셜벤처 펀드 1200억원 조성

정부-더불어민주, 일자리대책 마련 유망벤처에 창업비용 최대 1억 지원

앞으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이 뛰어난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당정협의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민간일자리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청년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셜벤처는 돌봄·주거·일자리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창의성과 기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당정은 특히 창업비용 지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아울러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 임팩트펀드’를

올해 안에 1천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운용성과가 좋으면 2022년까지 조성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창업 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 ▲실협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지역별 혁신창업 클러스터(가칭 창업마을) 조성 ▲지역 투자펀드 확대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철도역사 매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줄임집 등 사회기반시설은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된다.

나아가 금속 등 전통산업 6개 분야를 ‘뿌리 산업’으로 지정,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가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뿌리 기업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모형을 확산해 납품단가 인상과 비용절감으로 고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협뉴스